민주당, 이개호에 전남지사 불출마 요구

"형평성 맞지 않고 지역여론과도 배치" 반발

黨"1당 유지해야"…"호남 정략적 대상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인 이개호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6·13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은 5~6명으로 유독 이 최고의원의 이름이 부각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역여론과도 배치된다며 지지자들의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4일 민주당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최근 6·13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의사를 밝힌 이 최고위원을 만나 출마 자제를 요청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광주전남 선거를 총괄지휘해 달라고 권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미 오는 9일 이후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전남도당 위원장 및 최고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한 상황인데, 이 사무총장은 현역의원이 출마할 경우 원내 제1당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출마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중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진 의원은 이 최고위원 이외에, 경기도 전해철 의원, 인천 박남춘 의원, 충남 양승조 의원, 충북 오제세 의원, 대전 이상민 의원 등으로 이 최고위원만 두드러지게 불출마를 요청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 전남지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최고위원을 아예 경선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낙마'시키려 하는 것은 지역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오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후보를 경선도 보장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은 구태정치의 재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년전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략적으로 후보를 내리꽂으면서 지역의 혼란이 가중됐던 점이 오버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남지역 한 당원은 "국민의당 녹색돌풍속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대선 승리까지 고군분투한 이 최고위원에게 민주당이 보답은 커녕, 발목을 잡는 것은 텃밭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면 "호남을 민심에 맡겨야지 더 이상 정략적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불출마 요청과 맞물려 이 사무총장이 최근 전남 완도출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지역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장관을 이 최고위원의 대안 후보로 삼는 것 아니냐는 시각때문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내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인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이 쪼개지면서 통합신당인 미래당에서는 주승용의원이, 민주평화당쪽에서는 박지원의원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이들 쟁쟁한 후보와 싸워 이길수 있는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전남지사 선거전은 지역별, 세대별로 나눠진 표심과 인물론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미래당-민평당의 3자구도에서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최대 6곳이나 되는 등 '미니총선'을 방불케해 선거의 방향타가 될 전남지사 후보의 역할이 상당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있는 후보가 절실하다는 게 민주당 전남도당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현재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박준영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오는 8일 예정돼 있고, 현역 국회의원 중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이 모두 나올 경우 4석 정도가 보궐선거 대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지사 선거판에서 아예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불출마 이야기가 나왔던 김영록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게 심상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조용한 텃밭을 흔드는 꼴로 지역정서가 무시된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면 당원은 물론, 지역민심도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최고위원은 "불출마 요청에 대해 장기간 압도적 여론조사 1위인 대상후보가 당사자에 의한 이유가 아니라 중앙당 요청에 의해 불출마한다면 반드시 지지의사를 보인 도민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유가 필요하다고 이 사무총장에게 말했다"면서 "출마의지에 변함이 없어 9일 이후 13일 이전에 사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통합반대파 민주평화당

"우리가 캐스팅보트 쥘 것"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는 4일 국회 의석 17석을 확보해 민평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준위 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의결권 구조 상 17석이 확보되면 민평당이 국회 내 가부를 결정할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평당 예상 의석수는) 매직넘버인 17석을 넘어 19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며 "반대로 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해서는 최소 34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래당 의석수는 다 합쳐도 32석을 못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기준 재적의원은 296석으로 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등을 포함한 범진보진영 의석수를 분석하면 총 129석이 되기 때문에 19석만 채우면 절반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미래당에 남지만 민평당 당론에 따라 표를 더해줄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더하면 18명이 되고 거취를 고민 중인 이용호 의원이 민평당에 합류할 경우 실질적으로 19명의 의원을 보유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평당 창당 추진파인 의원 15명은 5일 오전 10시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셋째)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왼쪽 둘째) 대표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논의 끝에 결정한 당명 '미래당'을 공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중로 최고위원, 바른정당 유 대표, 국민의당 안 대표,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지방선거 출마 靑참모진 속속 사퇴

박수현·문대림·오중기 등 2일 동반 사표수리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자 이달 말 대거 떠날듯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이달 청와대 참모진 1기 줄사퇴가 본격화됐다. 지방선거에 뛰어들 인원은 1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에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3명의 사표가 동반 수리됐다. 박 대변인은 충청남도지사, 문 비서관은 제주도지사, 오중기 선임행정관은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며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 후임은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로 임명됐다. 한때 대변인 후보로 거론되던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도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은 지난해 연말 참모진 가운데 지방선거를 위해 첫 사표를 냈다. 황 전 비서관은 전북 임실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출마자는 다음달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다음달 15일까지는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선거 유세 대목인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은 데다 당내 경선 준비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자를 준비하는 참모진들은 이달 말 청와대를 대거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국민의당 중재파 공동대표설에 "의견 존중"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일 미래당 합류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 내 중재파 의원들이 신당의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분들은 제가 존중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추천하는 분은 국민의당이 존중하는 방식이 맞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3차 확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내에선 통합신당 합류를 선언한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중재파 일부가 신당의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는 "국민의당에서 통합개혁신당에 합류하실 분들이 확정되면 제가 출범 초반에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의 중론을 모아 안철수 대표와 제가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신당 당명이 '미래당'으로 확정된 데 대해 "중론에 따라 표결로 가고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미래당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초 신당 당명 결정 과정에서 바른정당 측은 바른국민당을, 국민의당 측은 미래당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표는 "정당 중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은 통합정당밖에 없다"며 "책임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풀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했다.